

원산지표시 위반 '기승'... '남도김치' 이미지 실추 우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제점검 중국산 고춧가루 등 15곳 위반 재료 납품 업체 피해사태 발생 '통관~유통 전 과정 집중점검'

광주·전남에서 유통·가공되는 배추와 절임배추 등의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가 다른 배추를 포대같이 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 소금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수법도 다양한데다 중국산 김치나 깍두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있어 광주·전남의 우수 먹거리

인 '남도김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 총 180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638명이 투입돼 9440개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15개소가 적발됐다. 11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4개소는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A업체의 경우 무안에 위치한 배추밭에서 포전거래로 배추를 구매한 후, 그물망 작업 과정에서 해남망갈배추로 원산지를 거

짓표시해 적발됐다. 위반수량은 총 20톤으로 금액은 1700만원이다.

B업체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며, 판매 및 보관 중 적발됐다. 위반수량은 200kg로 금액은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한다.

C업체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유통업체로부터 구매, 본인 제조공장에서 박스같이해 국내산 배추김치와 깍두기인 척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수량은 총 13톤이다.

지역 한 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한 가공업체에 김치를 의뢰했다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인 절임배추를 가공, 납품받았다가 전량 회수·폐기처분하

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업체 관계자는 "국내산이라고 믿고 납품받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듣고 전량 회수했다"며 "이는 농수산물을 믿고 사주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막심한 손해 뿐만 아니라 자사 이미지가 지 실추된 상황인 만큼 법적 대응과 손해 배상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종 김장 재료 제조 및 유통 과정을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의 우수한 재료로 만든 '남도김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김치대전' 등을 통해 지역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있는 만큼 거짓 원산지 표기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수입농축산물 통관자료 및 유통이력관리 정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사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부정 유통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산 김치와 배추 등 구입량 및 원산지 표시 확인, 유통업체 가공·판매업체 등에 판매한 내역을 추적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조사 등 상습적이고 규모화된 위반사범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한빛 1, 2호기 운영변경허가서 제출 한수원 규탄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이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영광 노후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서 졸속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1면서 계속 하지만 전남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내 전력 공급과 수요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남은 전력을 타 시·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장은 "국토 서남지역 중심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국의 41.1%를 차지하는 등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며 "현행 전력망 설치·송전사업자인 한전이, 송변전사업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는 등 권한이 분리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상구 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역할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법'의 제·개정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관왕 쾌거

국무총리상·행안부 장관상 동시수상 2억5000만원 확보

광주시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단체 간 확산·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지방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대회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자치단체에 2개의 상을 수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수상 특전(인센티브)으로 2억 5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191건에 대해 분야별 사전심사, 내·외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 평가를 통해 대통령상 2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7건 등 총 3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사위원

회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농업법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음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한 사례다.

광주시는 또 예산절감 분야에서 예산담당 관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고 4대 분야 16개 과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재정운용 기본 방향과 핵심사업 위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비효율 예산 발굴을 위한 내부 제안시스템 상시 운영 등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경기 약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